건축공간연구원

연구과제 소개

구분	과제명	과제책임
기본 과제	전기차 확산에 따른 주거지역 충전설비 설치 · 운영 방안 연구	권오규
	기후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도시 정책 개발	이은석
	공유유산 개념을 적용한 국외사적지 활용 · 관리 정책 연구	손은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시행계획 수립지침 마련 연구 : 농촌특화지구 관련규정을 중심으로	여혜진
	저소득 고령자의 지역사회 지속 거주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방향 연구	김준래
	가설건축물 안전기준 마련 연구	이여경
수시 과제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에 대응하는 공간환경 정책방향	유예슬
	건축행정 데이터 기반 재해 취약 지하층 주택 현황 분석	안의순

기본과제

❶ 전기차 확산에 따른 주거지역 충전설비 설치·운영 방안 연구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차)는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신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가지고 있어 정부는 전기차 확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시설 부족은 전기차 사용자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전기차 구매희망자의 구매 욕구를 감소시켜 전기차 확산의 가장 큰 병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2022년 1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을 개정하여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대상을 확대하였다. 개정된 법에서는 아파트의 경우 3년 내에 시 · 도 조례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 시점(2022.1.28.)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100세대 이상의 기축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면수의 2%이상을,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면수의 5%이상의 공간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설계 단계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포함할 수 있으나, 기축 공동주택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다수의 기축 공동주택은 입주민이 사용하는 차량에 비하여 주차장 면수가 부족하여 충전시설 설치 공간의 확보뿐만 아니라 충전시설 확충으로 인해 증가하는 전력량을 감당하기 위해 전력설비 증설이 필요하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의 위치 및 구획 기준이 아직 정리되지 않아 「주차장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전기차 충전시설 사용자 편의성, 화재 안정성, 경제성 등에 대한 고려가 함께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는 기축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기축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등 관련 인프라 확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사전에 진단하고, 효과적인 전기차 보급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하고자 한다.

권오규

❷ 기후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도시 정책 개발

2022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됨으로서 종합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제도적 기준이 마련됐다. 「탄소중립기본법」 제29조 탄소중립도시의 조성은 도시에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기능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까지 환경부의 시범사업으로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그린도시사업', '탄소중립그린도시사업'이 추진됐다. 두 사업을 통해 도시에서 기후변화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기술과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성을 높이는 기후적응기술, 자원 순환을 통한 탄소고정기술 등이 공간적으로 적용 가능함을 실증했다. 결과적으로 각 기술들이 도시에 분산되어 설치됨으로서 도시가 전반적으로 기후위기 대응력을 향상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얻었다. 기후 대응 기술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설계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용도·지역·지구의 기준 및 지침의 조율 없이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이 연구는 탄소중립도시가 미래 도시의 하나의 비전으로서 현실화되기에 필요한 선행 사업과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현 제도상 한계를 고찰하고 도시설계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탄소중립기본법」을 기준으로 사업 실현성이 높은 지구단위 수준의 도시계획과 연계할 수 있는 정책안을 개발하고자 한다.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탄소흡수·고정이 균형적인 기후위기 대응력이 강화된 도시가 우리나라에 일반적인 도시로 확산 될 수 있도록 본 연구의 결과가 탄소중립도시의 정책적·제도적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은석

❸ 공유유산 개념을 적용한 국외사적지 활용·관리 정책 연구

국외소재문화재란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재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문화재보호법」 제2조제9항)으로 일반적으로 환수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2017년 「문화재보호법」이 현행과 같이 개정됨에 따라 해외반출 문화재 외에도 대한민국과 역사적·문화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이에 건축물·공간환경 등 부동산 문화재인 국외사적지 또한 새롭게 포함되었다. 현재 국외사적지는 약 1천여 개소가 조사되었는데, 해외에 위치하여 실질적 조사 및 관리가 어려워 멸실·훼손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국외사적지는 건축물·공간환경 등 부동산 유산이라는 점에서 실질적 환수가 어려워, 현지 활용의 정책 패러다임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소재국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문화유산을 공동으로 보호·활용하는 '공유유산(Shared Heritage)'의 개념을 적용한 국외사적지 활용·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공유유산이란, 2개 이상의 국가들이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유산을 말한다. 기존의 국외사적지가 대한민국과 관련된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대상을 중심으로 조사되었다면, 공유유산의 경우 이중 현지 소재국에서도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유산이 대상이 된다. 공유유산의 개념을 적용한다면, 현지 소재국에서도 해당 유산을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인식하고 국가 간 협력을 통한 공동의 활용·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 연구는 K-공유유산의 기초 개념을 정립하고 시범사례 운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외사적지의 멸실·훼손을 막고 문화유산을 통한 국제 협력 및 교류를 강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손은신

❹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시행계획 수립지침 마련 연구 : 농촌특화지구 관련규정을 중심으로

올해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 시행된다. 이 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소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촌특화지구를 설정하며, 시행계획의 이행을 통한 통합 지원체계인 농촌협약제도를 통해 농촌공간정책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 법에서 농촌특화지구는 농촌의 난개발에 대응하는 관리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가지며 국토·토지이용 관리체계와 연계되어 운용되는 토지이용 관리수단이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등에 따라 공장, 축사, 태양광 발전시설 등 정주성을 침해하는 용도의 입지가 마을 내부와 인근에 무차별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적 여건과 농촌의 생활환경과 관련된 대지, 생산환경과 관련된 농지, 목장용지, 공장용지, 자연환경과 관련된 임야, 하천 등의 토지이용이 혼합적으로 구성된 공간적 여건에 대응하여 토지이용의 공간적 구성 오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역할 수행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시행계획 수립지침에서 농촌특화지구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계획수립권자가 기본계획에서 농촌특화지구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시행계획에서 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행위규제에 관한 사항을 결정 및 고시하는데 요구되는 세부적인 사항이다. 이에 따라 계획에 기반한 농촌 여건 맞춤형 용도 입지 관리가 정착되고 지역이 자율적으로 유연하게 농촌 토지이용의 공간적 구성 오류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하고자 한다.

여혜진

❺ 저소득 고령자의 지역사회 지속 거주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방향 연구

우리나라는 2025년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이 20.6%에 도달하면서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측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 계획에 따라 부처별로 다양한 정책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정책 간 연계가 미흡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자 주거분야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기존 고령자 주거안정과 복지서비스 연계 정책들은 주로 신규로 건설하는 임대주택단지의 확대와 지역사회와 단절된 노인복지시설 공급으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주거지원 정책들은 분명한 순기능도 존재하지만, 다양한 고령자 층위나 계층별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대내외적으로 '지역사회 지속 거주(AIP)'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사실상 저소득 고령자 주거지원 정책과 정합성을 검토하려는 시도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현 시점에서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한계를 진단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정책 유형별로 쟁점과 한계를 밝힘으로써 저소득 고령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지속 거주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현행 저소득 고령자 대상 주거지원 정책과 지역사회 지속 거주 개념에 대한 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내에 지역사회 지속 거주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소득 고령자의 특성 및 복지서비스 수요를 고려한 기본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법제 개정 사항, 정책 유형별 고도화, 공급 및 운영·관리 체계 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김준래

❻ 가설건축물 안전기준 마련 연구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설치한 건축물로 정해진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바로 철거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어, 건축물에 적용되는 법령과 안전기준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추진으로 허가 및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허가 또는 신고된 가설건축물은 약 62만 동(세움터 제공자료)으로 2017년에 비해 2021년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건수는 약 1.8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가설건축물을 일시적인 사용이 아닌 일상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또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컨테이너에서 발생한 화재는 751건, 인명피해 20명(사망 4명), 재산피해액은 34억 원이며,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한 화재는 1,304건, 인명피해 52명(사망7명), 재산피해액은 1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건축물 관련 안전사고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가설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대응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가설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건축물로 건축하도록 되어 있어 화재발생 시 취약한 구조이지만 존치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화재안전을 위한 제도적 관리방안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 연구는 가설건축물 조성 및 안전 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가설건축물 유형별로 합리적인 안전기준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최근 급증하는 가설건축물 안전사고에 대하여 선제적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여경

수시과제

❶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에 대응하는 공간환경 정책방향

우리나라 가족구성이 다양해지면서 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도시에 정주하는 사회적 주체 중 하나로 바라보게 되었다. 공간의 관점에서는 반려동물의 산책과 외부활동을 행할 수 있는 근린환경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반려견 놀이터 설치 또는 기존 시설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내 반려동물 관련 공공공간은 기존 공공공간 내부에 작게 설치되거나 대규모 특화공원으로 별도로 조성되고 있는데, 주민 민원, 법적 규제 등으로 인하여 입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어렵게 대상지를 선정하더라도 법률의 산재, 주무부서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조성 및 운영과정에 애로사항이 있고 반려동물 및 반려인의 행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설계되어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반려동물 관련 공공공간의 조성현황과 조성 및 운영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더 나은 품질의 공공공간을 생산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이슈를 발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공간 조성 정책 추진에 참고가 되는 기초 정책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유예슬

❷ 건축행정 데이터 기반 재해 취약 지하층 주택 현황 분석

기후변화로 인하여 집중호우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면서, 침수 등 재해에 취약한 지하층 주택(반지하)에 거주하는 국민 피해도 가중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하층 주택 정책 수립 및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에 집중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하층 주택은 「건축법」 제정 당시부터 조건부 허용되었으나, 주택 부족으로 지하층 거실 설치기준이 완화되면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자가용 보유가 증가하여 주차장이 부족해지면서 주택 내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고, 1층에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및 층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면서, 지하층 주택 대신 필로티 주차장을 설치하는 건축물이 늘어나고 지하층 주택 건축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지하층 주택의 형성과 도태 과정과 최근 지하층 주택 관련 입법 경향을 반영하여, 재해 취약 지하층 주택의 기준을 단독주택(다가구, 다중),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용도 건축물 중 1층 필로티 구조 주차장이 없고,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조적조 구조인 주택으로 설정하고, 민간개방 건축행정 데이터에서 건축물 동 단위 전수 목록을 추출하여 전국 재해 취약 지하층 주택 185,518동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재해 취약 지하층 주택의 92.2%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나타났고, 법정동 단위에서도 재해 취약 지하층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재해 취약 지하층 주택 통계 및 전수 목록은 지하층 주택의 재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건축행정 데이터에는 건축물 각 층의 표고 정보가 없어 침수 취약성 판단에 한계가 있으며, 현장조사 등을 통한 검증이 후속되어야 한다.

안의순

제8차 건축도시정책연구 네트워크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지난 4월 11일(화)부터 12일(수)까지 양일간 공주 청년센터와 제민천 일대에서 '제8차 건축도시정책연구네트워크'를 개최하였다. '건축도시정책연구네트워크'는 매년 지역발전연구기관과 건축·도시 관련 현안에 대해 소통과 협력 연구를 추진하여 지역 건축도시정책연구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왔다.

올해는 '인구감소시대 지역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인구감소시대 지방도시의 이슈와 과제, 지역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과 민간주체의 역할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정책 대응방향 및 협동연구 추진방안을 모색하였다.

행사 첫 날인 11일에는 발제와 토론을 통해 인구감소 문제를 둘러싼 지역별 현안과 정책적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먼저 임준홍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축소도시시대의 유휴부동산 통합적 관리와 활용'을 시작으로, 권오상 퍼즐랩 대표의 '체류인구 증대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방안'과 윤주선 충남대학교 교수의 '민관협력 마을재생', 끝으로 서수정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지역소멸위기 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각각 발표하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서수정 선임연구위원이 진행을 맡고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동영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박봉철 부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 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12일에는 행사에 참석한 지역발전연구기관 전문가들과 공주 원도심 일대를 답사하였으며, 지역재생 간담회를 마련하여 청년들의 공주 지역이주 등 지역활성화 관련 정책 대응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익적 주택법제 발전 방향 세미나 개최

건축공간연구원 주거문화연구단과 재단법인 동천은 지난 3월 27일(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공익적 주택법제 발전 방향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임대주택법제도의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주택법제 관련 관계자, 공공임대주택 관계자 등 민·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는 최계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연구'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체계에 대한 재편방향과 「공공주택 특별법」의 개정방향을 설명하였다. 두 번째 발제는 염철호 건축공간연구원 부원장의 '사회주택 현황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서 사회주택의 정의와 운영현황을 짚어보고 다양한 거주가치 구현을 위한 사회주택의 지향점을 살폈다. 세 번째 발제는 양동수 사회혁신기업 더함 대표의 '주거 안정화를 위한 새로운 공급 모델 분석과 개선 방향'을 통해 새로운 주거패러다임과 공급모델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토론은 유욱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천현숙 고려대학교 겸임교수, 진남영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도건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가 참여하여 사회주택의 발전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2023 건축공간연구원 - (사)한국여성건설인협회 공동세미나 '건축도시분야의 ESG 전략'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지난 4월 13일(목)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3 건축공간연구원-(사)한국여성건설인협회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건축도시분야의 ESG 전략'을 주제로 지속가능한 건축·도시분야의 발전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강지수 (사)한국여성건설인협회 부회장이자 넵스랩 대표가 'ESG 개념과 트렌드'를 주제로,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개념과 관련 이슈를 통해 ESG의 도입 필요성과 전망을 설명하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이은석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의 '친환경건축시장 활성화를 위한 녹색채권 활용 모형'을 주제로, 영국, 네덜란드 등 해외의 주요 사례와 관련 국내 상품을 살펴보았으며 녹색건축 채권 도입 및 적용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종합토론은 선주현 (사)한국여성건설인협회 부회장이자 플랫그라운드 대표가 좌장을 맡았으며, 발표자 전원이 토론에 참여하여 건축·도시 분야에서 ESG의 한계와 이를 고려한 제도적 장치를 논의하였다.

2023 대한건축학회 – 건축공간연구원 건축자산 정책세미나 ‘근현대 건축유산의 면단위 보전 관리 현황과 과제’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대한건축학회는 지난 4월 27일(목) 부산 벡스코에서 ‘2023 대한건축학회-건축공간연구원 건축자산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근현대 건축유산의 면단위 보전 관리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건축자산 관련 전문가, 지자체 건축자산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효과적인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정책제안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제1부 주제발표는 박일향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의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이상희 목원대학교 교수의 ‘소제동 건축유산과 도시재생에 관한 이상과 현실의 괴리’, 마지막으로 김미정 조선대학교 건축문화연구실 연구원의 ‘거문도 근대건축자산 고찰’ 순서로 진행되었다.

제2부 종합토론은 ‘면단위 근현대 건축유산의 관리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송석기 군산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규철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안국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주야 시간과 공간연구소 이사가 참여해 소제동 건축자산과 거문도 근대건축자산의 관리방향과 한계, 면 단위로서 건축자산 보존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auri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CPTED 정책 발전 방향 심포지엄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대한건축학회는 지난 4월 28일(금) 부산 벡스코에서 공동 학술 심포지엄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CPTED 정책 발전 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부영준 법무부 보호정책과 사무관이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통해 중앙부처의 CPTED 사업현황과 향후 추진과제 등을 발표하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임보영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 환경설계 방안’으로,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필요한 과제를 제안하였다. 세 번째 주제발표는 윤진희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미국 CPTED 사업(Project Green Light Detroit, 이하 PGLD) 현황 및 영향 분석’으로, 미국 디트로이트에 범죄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PGLD의 의의와 시사점을 공유하였다. 마지막 주제 발표는 오하늘 경상국립대학교 연구원이 ‘CPTED 사업 효과가 있나요?’를 주제로, 시설물의 정량적, 정성적 효과 분석 결과를 설명하였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강석진 경상국립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기욱 부산연구원 시민안전연구센터장, 이연지 이음파트너스 이사, 이승재 목원대학교 교수, 조영진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하여 CPTED 사업과 연구의 추진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3 auri 국가한옥센터 한옥포럼 'K-Village, 한옥마을 생각하다'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대한건축학회는 지난 4월 28일(금) 부산 벡스코에서 '2023 auri 국가한옥센터 한옥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K-Village, 한옥마을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한옥마을의 보급현황 및 기획단계 시 고려사항 등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한옥마을 보급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는 방보람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원의 '한옥마을 조성사업의 현황과 과제'로, 한옥마을의 인식 및 수요특성 조사결과를 통해 한옥마을 조성사업의 향후 과제를 제안하였다. 두 번째 발제는 이재용 오피스베타 본부장의 '고양창릉 역사문화마을 마스터플랜'으로, 세계문화유산 서오릉에 인접한 부지에 계획 중인 한옥마을 마스터플랜 수립과정 등을 소개하고 쟁점사항을 설명하였다. 세 번째 발제인 구본환 건축사사무소 오른 대표의 '화성 태안3지구 한옥마을 조성사업의 진행과정'은 한옥마을 고유특성을 살리기 위한 가로 구성, 주차 문제 등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끝으로 김성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정책팀장의 '서울한옥 4.0 정책에 따른 한옥마을 확대 조성사업'을 통해 사업의 주요내용 및 한옥마을의 세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종합토론은 류성룡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고주환 새한티엠씨 대표, 안선호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유식 서울특별시 한옥정책과장, 신치후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하였으며, 한옥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펼쳤다.

news

2023 제1차 AURI 건축도시포럼 '20세기 도시설계를 넘어서'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지난 5월 16일(화)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23 제1차 AURI 건축도시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건축·도시 분야 지식 공유 및 정책현안 진단, 연구과제 발굴 및 기획을 위한 자리로, ZOOM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와 함께 진행하였다.

발제는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20세기 도시설계를 넘어서'를 주제로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인구구조의 변화, 거주자 니즈의 변화, 코로나19 이후 생활의 변화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탐색하고, 도시 내 저이용 토지를 활용한 도시공간의 재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컴팩트시티'의 사업배경과 필요성을 발표하였다. 다음으로 강현수 前 국토연구원 원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선 가운데 주거복지를 넘어 공간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개념과 제도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마지막 자유토론은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영현 건축공간연구원 건축정책본부장, 성은영 건축공간연구원 주거문화연구단장, 여혜진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하여 다중 주거 거점, 농촌공간 재구조화, 비용과 효율·안전을 고려한 도시설계와 건축물 등 건축·도시 분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2023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건축문화자산센터 공동세미나 '국내 교정시설 건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개최

건축공간연구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와 건축문화자산센터는 지난 5월 17일(수)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교정시설과 관련하여 과거와 현재의 시점에서 건축자산의 관점과 공공건축 조성과정의 쟁점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에 '국내 교정시설 건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금용명 교도소연구소 소장을 연사로 초청하여 교정시설의 역사와 정책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짚어보았다.

주요 내용으로 조선시대부터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모습을 살펴보고, 미국, 일본 등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주요 특성과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교정시설에 대한 다양한 주체들의 관심뿐 아니라 교정시설 운영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하였다.

auri

2023년도 한국노년학회 전기학술대회 건축공간연구원 기획발표세션 진행

건축공간연구원은 지난 5월 19일(금)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ECC 및 포스코관에서 2023년 한국노년학회 전기학술대회 기획발표세션을 진행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응전략'을 주제로, 건축공간연구원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 등 다수의 기관이 참여하여 기획발표세션, 특별세션, 자유발표세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건축공간연구원은 기획세션발표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주제발표 및 토론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정책과제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먼저 윤진희 부연구위원·최가윤 연구원·고영호 연구위원의 '연령통합 생활환경지표 연구'를 시작으로, 한승연 연구원·고영호 연구위원의 '지역사회 고령친화 생활마을 조성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연구', 김준래 연구원·변은주 연구원의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위한 돌봄-거주 연계 모델 기본방향'을 각각 발표하였다. 한편 방재성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유애정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연구센터장, 강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정책연구센터장이 토론에 참여하여 기존 제도의 한계와 시범사례 등을 짚어보고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개선의 필요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2023 제1차 AURI-광역지자체 건축자산 진흥 정책 심포지엄 '경기도 건축자산 진흥 정책의 추진현황과 발전방향'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경기도는 지난 5월 31일(수) 경기도청 구청사 신관에서 '2023 제1차 AURI-광역지자체 건축자산 진흥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경기도 건축자산 진흥 정책의 추진현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경기도에서 수립 중인 제2차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경기도의 건축자산 진흥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먼저, 제1부 주제발표에서는 고용수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과장의 '제2차 경기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주요내용', 최호진 성균관대학교 공학연구원의 '제2차 경기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과정과 주요 현안', 김재영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공간정보사업처 대리의 '공간정보 기반 건축자산 관리 효율화'를 차례로 발표하였다.

제2부 종합토론은 '경기도 건축자산 진흥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윤인석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박기범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장, 이규철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안국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하여 제2차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특징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었다.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정책 심포지엄 개최

국회기후변화포럼과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은 지난 6월 8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원 중심의 부문별 접근을 넘어서 에너지, 건물, 교통, 자원순환, 흡수원 등을 바탕으로 우리의 고유한 도시공간에 특화된 종합적인 접근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포럼은 한국형 탄소중립도시의 조성과 확산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도시설계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통합관리 방안과 입법 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승일 서울시립대 교수의 기조발제 '미래 변화를 고려한 한국형 탄소중립도시의 길'을 시작으로, 분야별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을 구성하였다.

주제발표에는 윤은주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의 '한국형 탄소중립도시의 조성과 확산방향', 이은석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의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도시설계 방안', 박창석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정책적 통합관리 방안과 입법 과제'를 각각 발표하였다.

패널토론은 이동근 서울대학교 교수(포럼 운영위원장)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건원 고려대학교 교수, 권용석 경북연구원 연구위원, 정주철 부산대학교 교수, 추소연 RE도시건축연구소장, 윤의식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장,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이 참여하여 한국형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auri

2023 국제 공공건축 네트워크 연례 컨퍼런스 참석

4월 17일(월)부터 20일(목)까지 워싱턴 D.C에서 미국 중앙조달기관(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GSA)이 주최하는 '2023 국제 공공건축 네트워크(The Workplace Network, 이하 TWN)'에 이영범 원장을 비롯하여 조시은 부연구위원, 백선경 부연구위원이 참석하였다.

네덜란드, 아일랜드, 미국, 캐나다 등 총 19개 국가의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TWN은 공공자산의 정책현안을 공유하고 미래 근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2019년 이후 다시 열린 올해 행사에는 회원국들의 주요 이슈를 업데이트하고 업무환경의 미래, 기후와 지속가능성, 변화관리, 데이터 등 공공자산 관리에 관한 의제를 공유하였다.

행사 1일차에는 회원국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환영회를 치렀으며, 행사 2일차부터 본격적인 주제발표와 토론 세션을 진행하였다. 먼저 이영범 원장은 회원국 현황 발표 세션에서 TWN이 지정하는 4개 부문(Workplace/return to work, Climate & sustainability, Change management, Data metrics)에 따라 건축공간연구원의 현황 및 계획을 발표하였다.

행사 3일차에는 조시은 부연구위원이 'Climate and Sustainability Industry Roundtable' 토론 세션, 행사 4일차에는 백선경 부연구위원이 'Presentation on Data Gathering/Metrics & Group Discussion on Data & Metrics' 토론 세션에 각각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건축공간연구원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공공건축 관련 기관 간의 국제적 협력체계를 강화했을 뿐 아니라 각국의 공공건축 및 공공자산 관리 관련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논의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가질 수 있었다.

건축공간연구원-
청주시 서원구청-청주상당경찰서-
서원대학교 MOU 체결

건축공간연구원과 청주시 서원구청, 청주상당경찰서, 서원대학교는 지속가능한 범죄예방 환경모델 발굴을 위한 상호 협력을 위해 지난 5월 18일(목) 청주상당경찰서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청주상당경찰서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컨설팅 ▲지속·확산 가능한 범죄예방 환경 모델 ▲범죄예방 정책 수립을 위한 학술정보·통계오류 및 각종 지표 공동 발굴을 위해 지원하게 된다. 향후 4개의 기관은 지속가능한 범죄예방 환경조성 모델 마련과 더불어 모델 확산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주기적인 정보 교류 및 학술 발표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범죄예방 환경조성에 대한 인식 개선에 노력하고자 한다.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은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범죄 불안감을 낮추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실천 전략"이라며,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세 기관과 함께 범죄예방 환경조성의 선도적인 모델을 발굴하여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건축공간연구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도시사회센터 MOU 체결

건축공간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도시사회센터는 아시아 국가 및 도시의 공간환경에 관한 연구 교류 및 협력을 위해 지난 5월 19일(금)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연구 과제를 위한 공동 연구 수행 ▲공동 세미나, 연구토론회, 국제컨퍼런스 등 국내외 관련 행사 개최 및 참여 ▲학술자료, 출판물 및 지식정보 등의 제공 및 교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력 교류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하게 된다.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은 "전 지구적 기후위기를 비롯하여 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한 각종 사회재난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도시사회센터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 아시아 도시의 공간환경 관리와 발전을 위해 시의성 있는 연구 수행과 국내외 성과 확산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